

200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꼭 알아 두세요

보건복지부는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올 2006년 사회복지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시행 정책들을 살펴보자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선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 (기존 120%미만)
- ▶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 ▶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 신축 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 예산 38,462백만원 국고지원.
- ▶ 장애인재활병상 확충 - 권역별재활센터 신축 인천, 강원 각각 100병상 증축. 예산 27,000백만원 건강증진기금 지원.
- ▶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 - 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당 4백만원 지원
- ▶ 금연상담전화 실시 - 금연클리닉 이용 어려운 흡연자에게 전화 금연 상담 서비스(1544-9030) 제공.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의무.
- ▶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기존 노인일자리 수 69천개에서 115천개로 확대, 기간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
-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 이동복지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자격기준 완화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조항 삭제. 3급

이상의 자격으로만으로 시설장(총무) 가능.

-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차상위 등 저소득층 70천가구 127천명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소액납부 포함) 92천가구,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중단(체납가구 포함) 186천가구 등 총 380천가구를 대상으로 '05.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70,430가구 127,228명을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15,822가구 28,39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54,616가구 98,834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동절기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도에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되 기존 수급자중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중지하여 건강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확정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이하 '확충대책')이 2005년 12월 26(월)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2005년 12월 27(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확충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5년간 총 4조3천 억 원의 재정을 투입시켜 공공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자문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술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으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여, 중앙 또는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민간 일반 병상 1만5036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치매요양병원을 31개소를 늘리는 한편 노인보건의료센터 8개소와 어린이병원 3개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 예방중심의 질병관리 체계 확립

지역 주민, 학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국민 부담이 큰 다빈도·중증·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사스(SARS), 조류독감(AI)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 백



신·격리병상 확보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응급의료, 혈액수급, 재활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공공재의 공급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5년간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도 (자료 보건복지부)

